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원택, 민주 전북자치도지사 후보 확정

6·3 지선 본선 승리 향한 행보 돌입... “도민이 주인되는 전북 대전환 시대 열겠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확정으로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경선 절차는 공식 마무리됐으며, 이 후보는 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본선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하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통합과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이 후보의 등장이 침체



된 전북 발전 담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도민 주권’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단순한 선거 조직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도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구현하겠

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도정 운영의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이 후보는 그간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치유하고 ‘윈윈’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경쟁했던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적극 수용해 민선 9기 도정에 반영하고, 각 후보 지지층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전북의 고질적인 지역 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저를 선택해 주신 도민들과 당원 여러분의 승리”라고 평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필승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말 국회의원의직을 사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해 ‘도민 주권’과 ‘전북 대전환’을 양축으로 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감사원, 공익감사 기각

“감정평가 적법·교통개선대책 공공기여 포함 가능”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접수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특혜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청구인 측에 통보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조감도

앞서 시민단체 등이 작년 12월 △공공개발사업 감정평가 저평가 및 위법 선정의 이해충돌 △공공기여 산정 시 교통개선대책 포함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 특혜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감사원은 지난 3월 현장 방문과 실사를 진행하는 등 정밀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감사원은 감정평가가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교통개선대책 역시 공공기여로 포함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 결정도 관련 법령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으로 확인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결정으로 그간 제기된 행정 절차상의 특혜 의혹이 해

소됐다”며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승인을 받은 자량은 2080년 준공을 목표로 6.3조2,000억원을 들여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여㎡를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자량은 470m 높이의 관광 전망타워를 비롯해 쇼핑몰·대형마트를 갖춘 프리미엄 복합쇼핑센터, 200실 규모 호텔,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3,536세대) 등을 건립할 예정이지만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민주 도당, 기초의원 1차 경선 18~19일 진행

완주·진안·무주·임실 등 6개 군 16개 선거구 대상 추가 경선 일정 순차 발표



세월호 참사 12주기... 희생자 추모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전주교 의사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묵념(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 이하 전북도당 선거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제1차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절차에 돌입한다.

전북도당 선거위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기초의원 제1차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등 6개 군 총 1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완주군 가 선거구에 신승기·이순덕·이진영 후보가, 완주군 나 선거구에 유이수·이명순·이완근·정종운 후보가, 완주군 다 선거구에 성종기·심부건·최광호 후보가 각각 경선을 치른다. 진안군 가 선거구는 김기호·김민규·박상일 후보, 진안군 나 선거구는 김명갑·박관순·이미옥 후보가 경쟁한다.

무주군 나 선거구에서는 문은영·오광석·육성훈·이광환·정재환 후보가 맞붙고 임실군은 가 선거구에 김정흠·김태호·정일운·홍대환 후보, 나 선거구에 김종수·임은두·장근수 후보, 다 선거구에 김영미·김용완·김종규·리시열·이정춘 후보가 각각

경선에 나선다.

순창군은 가 선거구 김정숙·이성용 후보, 나 선거구 문완식·오수환·전계수·최용수·한재희 후보, 다 선거구 마하룡·손종석·정남호·조태봉 후보가 경쟁하며, 고창군은 가 선거구 김송철·박성만·이경신·이선덕 후보, 나 선거구 고정호·박종열 후보, 다 선거구 강상원·오세환·임정호 후보, 라 선거구 김삼용·조규철 후보가 각각 포함됐다.

다만 완주군 라 선거구와 무주군 가 선거구는 후보 간 합의에 따라 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선출 정수보다 민주당 후보 수가 같거나 적은 곳으로,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된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100%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4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권리당원이 전화를 받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1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권리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선 결과는 19일 오후 6시 30분 전북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기초의원 후보는 득표 순위에 따라 순번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3인

경선의 경우 1·2·3위 순위에 따라 각각 1-가, 1-나, 1-다 번호가 배정된다.

전북도당 선거위는 “향후 추가 경선 일정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방선거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전주대대 이전·천마지구 도시개발 '정상 궤도'

시, 올 상반기 내 보상 착수·연내 착공 목표로 절차 이행

전주 북부권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대대 이전사업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도심지 내 노후화된 군부대 시설인 전주대대를 이전하고, 현 전주대대 부지와 주변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그동안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된 농지전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민간사업자인 (주)에코시티의 최대 출자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24년 5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농지 잡식을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국방부로부터 변경 승인 특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부터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구조 재편 △자금조달 경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민자유치시행협약서 변경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등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적 준비가 완료됐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중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이행해 오는 8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대대 이전과 함께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권희성 기자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회